

## 보건의료 반전평화팀 2025년 4차회의 정세브리핑(2025.12.27)

발제: 채민석

### <팔레스타인>

○ 2023년 10월 7일부터 2025년 12월 23일까지의 사상자를 추적한 가자지구 팔레스타인 보건부의 최근 수치(12.24, <Al Jazeera>)

- 확인된 사망자: 20,179명의 어린이를 포함하여 최소 70,942명
- 부상자: 최소 171,195명

### ○ 불안정한 휴전

- 가자지구의 정부 언론 사무소는 이스라엘이 10월 10일부터 12월 22일까지 공중, 포병 및 직접 사격을 통한 공격을 통해 적어도 875번 휴전 협정을 위반했다고 보도
- 팔레스타인 보건부의 최신 수치에 따르면, 10월 10일 정오에 휴전이 발효된 이후, 이스라엘은 최소 406명의 팔레스타인인을 살해하고 1,118명을 부상(12.24, <Al Jazeera>)
- 이스라엘 방위군(IDF)이 가자지구 남부에서 폭발물로 부상당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하마스의 군사력 재건을 책임졌던 라에드 사드(Raed Saad) 사살(12.14, <머니투데이>)
- 유엔 총회는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 무제한 인도주의적 접근을 개방하고, 유엔시설 공격을 중단하며, 점령국으로서의 의무에 따라 국제법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안 채택(한국 포함 139개국 찬성, 이스라엘, 미국, 아르헨티나 등 12개국 반대, 19개국 기권(12.12, <Al Jazeera>))

### ○ 가자지구 '평화 구상' 2단계 이행안

- 가자지구를 통치하고 재건을 감독할 국제기구가 연말 안에 발표될 예정. 12.29 트럼프와 네타냐후 백악관 회동 때 발표 가능성
- 평화위원회: 트럼프가 의장이 되어 가자지구 재건을 감독. 중동 및 서방 지도자 약 12명으로 구성
- 기술관료위원회: 가자지구의 일상 행정 담당
- 국제안정화군: 일단 1~2개 나라 병력으로 구성되며, 현재 하마스가 통제하는 구역에는 전개되지 않을 것, 참여 국가로는 인도네시아, 아제르바이잔, 이집트, 튀르키예 등
- 2단계 협상에서는 하마스 무장 해제 문제가 논의될 예정이나 하마스는 무장해제에 동의하지 않은 상태
- 이스라엘군 철수 문제도 논의될 듯. 다만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 카츠는 이스라엘군이 "가자를 절대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함(12.24, <연합뉴스>). 참모총장도 "yellow line이 이스라엘의 새로운 국경선"이라고 말함(12.8, <The Guardian>)
-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와 이집트를 연결하는 라파 국경 검문소를 곧 개방할 계획. 휴전 협정에 따라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가자지구를 떠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치. 아랍 8개국 외무장관들은 팔레스타인인의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라파 검문소가 양방향으로 열려야 한다고 강조(12.6, <뉴시스>)

### ○ 현재 가자지구의 의료 상황

- 가자지구의 거의 모든 병원과 의료시설이 공격을 받았고, 34개 병원을 포함하여 최소 125개의 의료시설이 피해를 입음
- WHO Health Cluster에 따르면 2023년 10월 이후 의료시설에 대해 825건의 공격이 있었고, 그 공격으로 985명이 사망하고 약 2,000명이 부상
- 팔레스타인 보건부에 따르면 의사, 간호사 및 구급대원을 포함하여 1,722명 이상의 의료종사자들도 이스라엘 공격으로 사망

- 영토의 36개 병원 중 18개만이 부분적으로 기능하고 있고, 3개의 야전병원은 극히 제한적으로 운영
- 4,000명의 어린이를 포함하여 18,500명 이상의 중환자가 의료 대피(medical evacuation)가 필요한데 여전히 접근이 불가능한 상태(12.26, <Al Jazeera>)
- 이스라엘이 가장 필수적인 의료용품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과자, 휴대폰, 전기자전거는 가자 지구로 들어갈 수 있지만, 항생제, IV 용액, 수술재료는 반입 금지
- 이스라엘이 일주일에 5대의 트럭만 가자지구로 의료용품 반입 허용하는데, 3대는 국제기구로 보급품을 배달하고, 2대만 정부가 운영하는 병원에 보급품을 배달(12.7, <Al Jazeera>)
- 가자지구 보건부는 성명에서 “필수 의약품 목록에서 완전히 품절된 품목 수는 321개로 52%”가 부족하고, “의료용 소모품 목록에서 완전히 품절된 품목 수는 710개로 59%”가 부족하다고 밝힘(12.21, <Al Jazeera>)

#### ○ 팔레스타인 경제 상황(팔레스타인 중앙 통계국과 팔레스타인 통화 당국 공동보고서)

- 2025년 가자지구의 국내총생산(GDP)은 2023년에 비해 84% 감소했고, 서안지구도 13% 감소
- 2025년 가자지구의 실업률은 77%, 팔레스타인을 오가는 무역량 감소
- 총 공공부채는 146억 달러로 2024년 국내총생산의 106%
- 팔레스타인 경제가 22년 전 수준으로 퇴보(12.26, <Al Jazeera>)

#### ○ 이스라엘, 서안지구 전역 불법 정착촌 공식화 계획에 서명

- 이스라엘 내각은 21일 서안에 정착촌 19개를 건설하는 계획을 승인
- 팔레스타인 당국은 “팔레스타인 땅 전체에 대한 식민 통제를 강화하려는 위함한 조치”(12.24, <연합뉴스>)
- 이스라엘 극우 재무부 장관 스모트리치는 당국이 정착촌 계획을 승인한 결정은 미래의 팔레스타인 국가의 설립을 막기위한 것이라고 말함
- 영국, 프랑스, 캐나다, 독일, 일본 등 14개국은 이스라엘의 조치를 비난, “지역 전역의 장기적인 평화와 안보를 위태롭게” 함
- 유엔은 점령된 서안지구에 있는 이스라엘 정착촌 확장이 이-팔 간 평화협정과 두 국가 방안 해결책에 걸림돌로 생각(12.25, <Al Jazeera>)
- 이스라엘 정부가 서안지구에 설치한 8개 불법 전초기지를 합법화. 2022년 말 출범한 네타냐 후 정부는 49개의 정착지와 불법전초기지를 합법화하고 174개 전초기지 건설. 정착촌(settlement)은 국제법상으로 불법이나 이스라엘 정부가 인정한 거주지인 반면, 전초기지(outpost)는 이스라엘 정부의 승인조차 받지 못한 곳으로 이스라엘 정착민들이 팔레스타인 주민 거주지에 무단으로 컨테이너나 조립식 주택을 만들어 전초기지를 만듦(12.10, <한겨레>)

#### ○ 단신

- 교황 “두 국가 해법, 유일한 방안…중재역 하겠다”: 전임 프란치스코 교황이 재임할 때인 2015년 교황청은 서안을 관할하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와 조약을 맺는 방식으로 팔레스타인의 국가 승인을 공식화(12.1, <연합뉴스>)
- ‘이스라엘 지원’ 반하마스 민병대 수장, 가자 남부서 피격 사망(12.5, <뉴시스>): 이스라엘이 하마스를 약화시키기 위해 무기를 지원한 인민군의 수장으로 ‘가자 인도주의 재단(GHF)’의 구호품 배급 현장관리도 담당
- 이스라엘 최대 무기 생산업체인 엘빗 시스템즈(Elbit Systems)와의 제휴를 하고 있는 아스펜 보험(Aspen Insurance) 런던 사무실 밖에서 항의 시위를 한 그레타 툰베리 등을 체포. 테러법 제

13조에 위배되는 금지조직(“팔레스타인 액션”)을 지지하는 플래카드를 전시(“I support Palestine Action Prisoners, I oppose genocide”)한 혐의(12.23, <Al Jazeera>)

<스톡홀름 국제평화 연구소(SIPRI) ‘2024년 100대 무기 생산 및 군사서비스 기업 보고서’ 발간>

○ 국제 군비지출·무기 생산 증가

- 세계 100대 무기 생산 기업의 무기 및 군사서비스 판매 수익은 6,790억 달러(약 997조원)를 기록(2024)

- 이는 2015년 이후 26%, 전년 대비 5.9% 증가한 수치로 가자지구 침공, 러-우 전쟁, 글로벌 및 지역 차원의 지정학적 긴장 고조, 계속 치솟는 군사비에 힘입어 군사 지출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

- 한국과 일본의 무기 제조업체의 판매는 동아시아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급증. 순위에 오른 5개 일본 기업은 총 무기 매출을 40% 증가시켜 133억 달러, 한국 생산업체 4곳(한화, 현대로템, LIG넥스원,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31% 증가한 141억 달러(약 21조원) 매출 기록. 한국 최대 방산기업 한화그룹은 자주포, 다연장로켓, 120mm 자주박격포의 수출 증가와 국내 납품 확대로 무기 매출이 42% 증가해 매출 80억 달러

- 상위 100개 무기회사 중 9개가 중동에 기반을 두고 있는데 총 310억 매출을 올렸고 전년 대비 14% 증가

- 이스라엘 기업 3곳은 무기 판매로 인한 수입이 16% 증가

- 중국 기업들의 합산 매출은 전년보다 10% 감소. 중국의 군수 조달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부패 의혹으로 무기 계약이 연기되거나 취소된 것에 따른 것으로 분석(11.30, <Al Jazeera> / 12.1, <연합뉴스>)

- 다음장 그림 참고

○ 군비축소 체제 약화

- 세계가 새로운 핵무기 경쟁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분석

- 핵무기 보유 9개국이 핵역량을 현대화·확대하고 있어, 냉전 이후에 감소하던 핵무기 수가 다시 증가 추세

<미국의 국가안보전략(NSS) 발표(12.5)>

- NSS는 ‘미국 우선주의’를 재확인하며 한국·일본 등 동맹국에 국방비 증액과 무역지출 확대를 요구(“미국이 아틀라스처럼 세계질서를 떠받치던 시대는 끝났다” “동맹국들은 나서서 비용을 지출해야 하며, 더 중요하게는 집단방위를 위해 훨씬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

-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팩트시트)에서는 한국의 국방비를 3.5% 수준으로 증액하겠다는 약속이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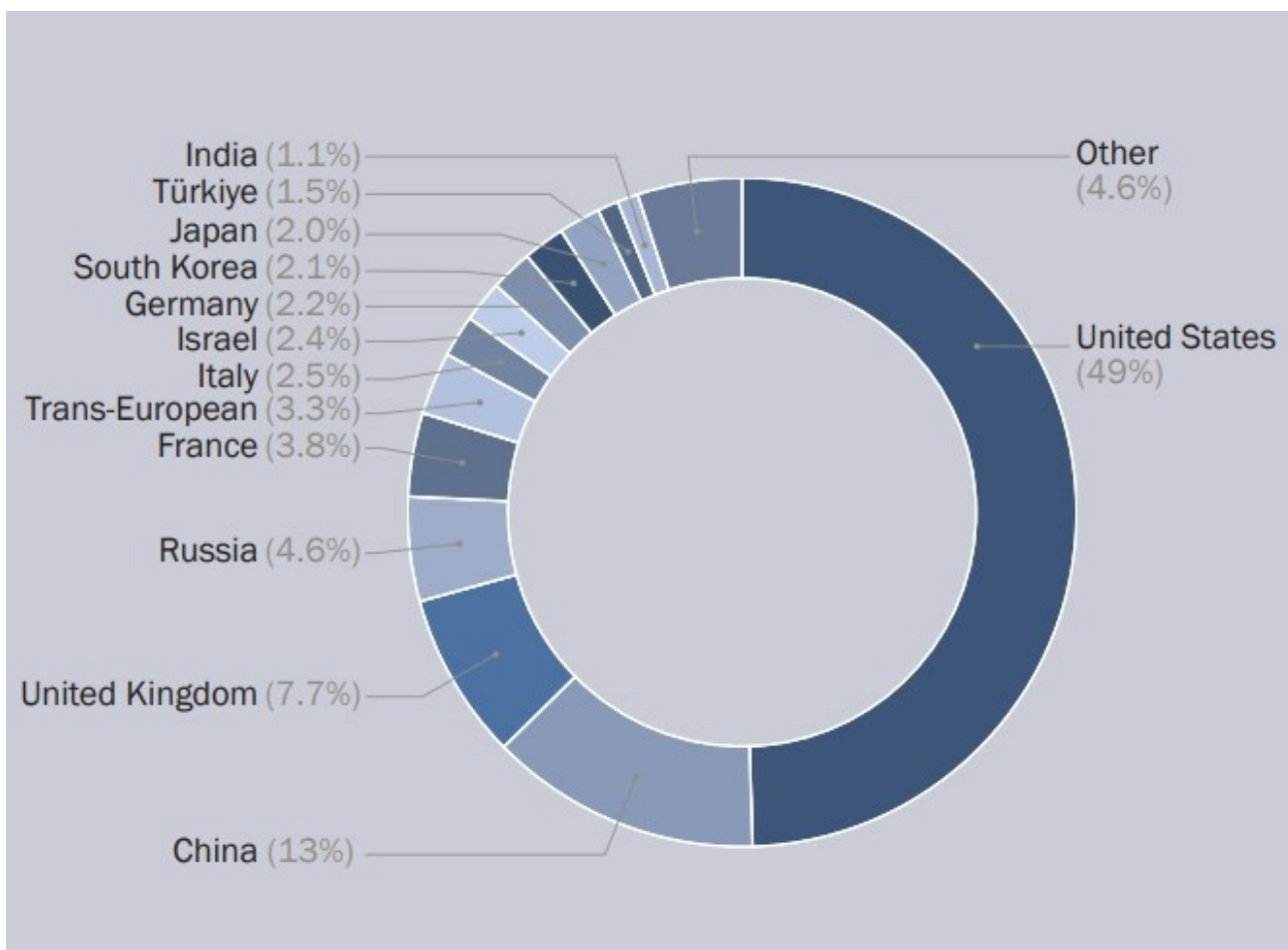
- 서반구를 미국의 국경안보, 핵심 공급사슬 및 지정학적 경쟁의 ‘최전선’으로 서술: 대규모 이민 유입 예방·억제, 필요시 ‘치명적 무력’으로 마약 카르텔 공격, ‘외국 적대 세력’의 서반구 핵심 자산 장악 저지, 미국의 전략적 요충지 사용권 지속 보유, 라틴아메리카에서의 군사 배치 강화(12.7, <신화통신>)

- 인도태평양 지역은 “21세기 지정학의 핵심”으로 규정하면서 대만 분쟁 억제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 “대만의 일방적 지위 변경을 지지하지 않는다”

- 한국을 일본과 함께 제1도련선 방어에 핵심 동맹국으로 규정하면서 한국에 더 큰 역할 수행 요구(12.6, <한겨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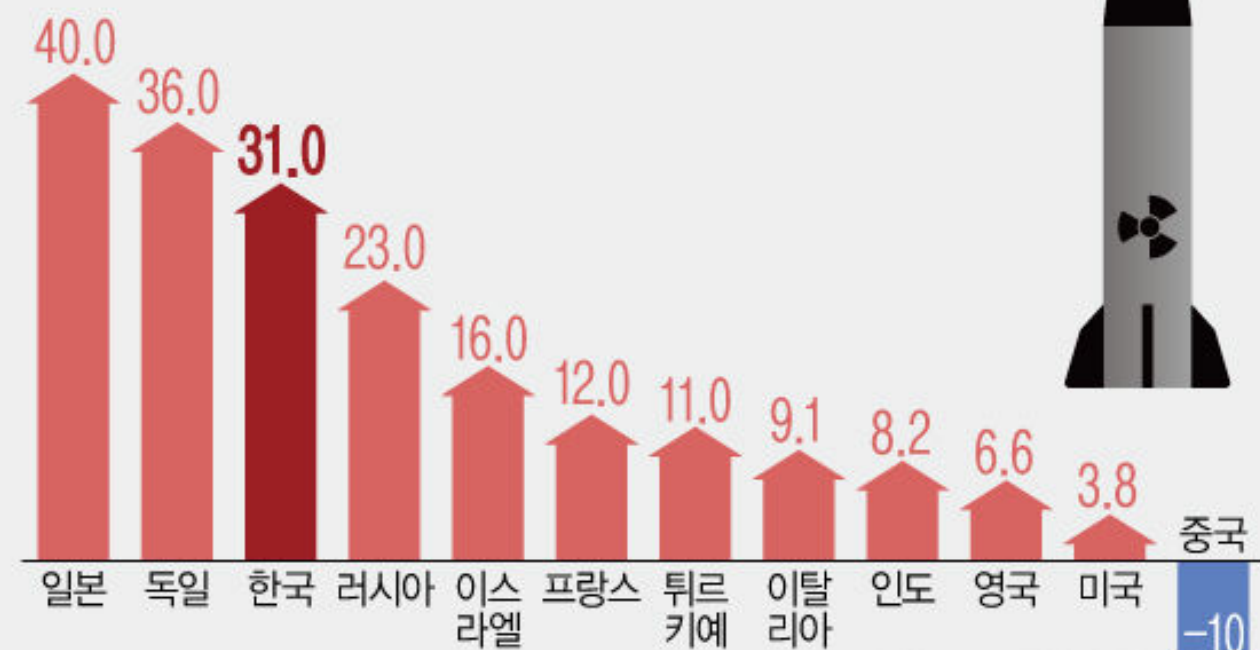
- 주한미군 역할을 대폭 축소하지 않겠다는 기조를 확인하며, 제1도련선 동맹국의 항구·시설 접근권의 확대를 요구

- 중국과 관련해서는 ‘상호관세’를 중심으로 한 경제외교와 국경 통제 강화를 강조



## 주요 국가별 무기 매출 증감률

단위: %, 2024년 기준 전년대비



자료: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

25.12.01 전진우 기사 618luc@newsis.com

- NSS에서는 북한이 단 한 차례도 언급되지 않음(트럼프 1기 17차례, 바이든 3차례). 미국은 과거 ‘한반도 비핵화’를 목표로 했으나, 이번 전략에서는 비확산 언급도 제외. 유럽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드러내며 ‘문명 쇠퇴(인구감소, 대구모 이주)’ 가능성 언급하고 중동·아프리카 비중 축소. 유럽 동맹국에 대해선 극우 정당을 억압하는 움직임을 ‘정치검열’로 간접비판 하고, 대규모 이주가 유럽 정체성과 NATO 체제를 흔들 수 있다고 강조(12.5, <머니투데이>)
- 중국 군축백서(11.27 발간)에서도 ‘한반도 비핵화’ 문구 삭제(12.8, ‘미·중 안보전략 변화와 주요 문서 발간’, 국회도서관 국가전략정보포털)

#### ○ 미국 국가안보전략과 관련한 분석들

- 참고1 <한겨레> ‘이제는 ‘미국 결정론’에서 벗어나자’(12.24): 2기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은 ‘패권국가’로서의 역할을 방기한다…(중략)…트럼프의 미국은 오히려 동맹국에 방위비를 더 부담하라고 강요하는 것을 넘어서 관세를 무기로 거액의 투자를 강요하는 등 현금 뜯어내기까지 자행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아메리카 대륙으로 퇴각하려 한다…트럼프의 미국은 전세계를 아우르는 패권국가가 아니라 아메리카 대륙을 세력권으로 하는 열강으로 자리매김하려 한다. 다른 지역에선 다른 열강의 세력권을 인정하겠다고 시사했다…미국이 이제 ‘역외 균형 전략’을 쓸 수밖에 없다. 미국이 직접 개입하지 않고, 동맹을 내세워 각 지역의 세력 균형을 꺾는 전략이다.
- 참고2 <미주한국일보> 파리트 자카리아(WP 칼럼니스트) 칼럼(12.24) ‘트럼프의 새 독트린 “미국을 다시 왜소하게”’: 미국의 뒷마당을 우선시하는 외교전략은 워싱턴이 세계에서 경제적 중요도가 가장 낮은 지역 중 하나에 집중하게끔 만든다…하지만 예상과 달리 트럼프의 국가안보전략은 미국을 글로벌 경제의 주변부에 묶어둔다…트럼프 행정부의 국가안보전략은 유럽 문제에 개입하지 않고 이민을 단속한다는 1920-30년대의 고립주의 대외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다…한 세기 전 미국이 마땅히 져야 할 책임을 회피하자 국제 체제가 붕괴하면서 2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졌다.
- 참고3 <노동자연대> ‘트럼프의 국가안보전략을 둘러싼 주요 쟁점들’(12.16): (NSS에서의 변화) 그 배경에는 미국이 아시아에서 대중 봉쇄에 실패한 현실이 있다. 이제 미·중은 단지 아시아가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있다…따라서 미국은 후퇴하기는커녕 오랜 자신의 뒷마당인 서반구를 포함해 세계 곳곳에서 중국을 밀어내는 ‘투쟁’을 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그리고 이제 트럼프는 세계 어디서든 중국과 대결하겠다고 하고 있고, 동맹국들에 이를 위한 더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이는 미국이 자신의 필요에 의해 부추긴, 각국의 군국주의화가 낳을 긴장을 제어하기도 더 어려워졌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런 다극적인 상황이 20세기 전반부에 양차 세계대전으로 비화했다.